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단 당한 채 기지촌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한때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이들을 소위 '애국자'로 부르기도 했다"라며 "실제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은 살아낸 할머니들은 한반도 분단사와 한국현대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이며,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한때는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서 한미 친선에 대리 역할을 해 온 기지촌 여성들이 노인이 된 오늘날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 소외 속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로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연관된다"며 "이들인

편하게 누울 단 한 평의 공간마저 없다면 과거 이들을 산업역군, 민간외교관으로 추켜세웠던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지촌 여성이었던 김모 할머니는 증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줘 고맙다"며 "방세 걱정 없이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온몸이 병 덩어리라서 병원비도 모자란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는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기도가 반성하고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인 고인정(민주, 평택2)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평택시의 경우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평택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민주당 내 여론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